

2024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인구소멸 대응, 지속가능한 로컬을 위한 인사이트' 세미나



2024 광주·전남 지방자치아카데미 참가자들이 지난 1일 인천 블루오션레지던스호텔에서 '인구소멸 대응, 지속가능한 로컬을 위한 인사이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통합 지역발전체계 구축, 지방소멸 위기 극복”

단기적 방문인구 증가 통해 지역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범위 상향 필요
선진지 자구노력·지역재생 성공사례 참관

가팔라지는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및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 생활인구 증가와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부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일보는 지난 1일 인천 블루오션레지던스호텔

에서 '2024 광주·전남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열고 '인구소멸 대응, 지속가능한 로컬을 위한 인사이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광주·전남 인구감소 위기 현황 및 대응방향-살고 싶은 서남권 지역으로'를 주제로 1차 강연을 맡은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은 "광주·전남의 경우 단기적 방문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함께 장기적 인구감소 적응과정에서의 지역혁신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간 연계와 협력에 기반한 통합 지역발전체계 구축과 같은 상생발전 전략 마련으로 지방소멸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주제로 2차 강연을 진행한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민간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기부금 접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액 세액공제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이러한 선행 조치가 이뤄져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에서 구입하는 답례품의 양적, 질적 품질 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전남일보는 지자체 공직자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 지자체 공무원 및 농업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제21기 광주전남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2024년을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과 일본 홋카이도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지방자치아카데미 참가자들은 지방소멸과 관련해 일본 홋카이도 니세코초, 히가시카와 등 성공 사례 현황을 찾아 위기 극복 방안 및 타 지자체와의 차별점을 들여다본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 일본 유바리시도 방문해 과도한 투자와 방만 경영이 불러온 공공행정 파산을 반면교사 삼아 지역민 모두가 지자체의 미래를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지상증계 '광주·전남 인구감소 위기 현황 및 대응방향-살고 싶은 서남권 지역으로'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동적 인구개념 기반 정책 어젠다 제시를
기초생활권 주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양적 감소를 거듭해왔다. 인구 감소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적 요인, 그리고 지역쇠퇴로 인한 인구 분포 감소 등 사회적 요인 등 2가지로 나뉜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가팔라지는 총인구 감소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는 부정적 연쇄효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으며 쇠퇴하고 있다. 지방은 인구감소로, 수도권은 인구과잉으로 양극화되며 '지방소멸'의 위협에 직면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효과적인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정책에서 지자체 주도의 인구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맞춤형 지역 인구감소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인근 지역 간 생활권 연계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에도 나서야 한다.

특히 광주·전남은 총인구 감소 및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인구유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서남권 거점도시로서 광주와 전남에서 살고 싶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대안적 인구기반 통계 파악을 통해 정주민구를 증



가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생활인구나 체류인구, 관계인구 등과 같은 동적인 인구개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적인 정주민구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단기적 방문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함께 장기적 인구감소 적응과정에서의 지역혁신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목포·순천 등 기초생활권을 주축으로 한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또는 지자체 연합이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 영국 지자체연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도시협정을 통해 행정적인 통합보다 지역경제 재생 및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한 대도시 중심의 연합체를 지향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 통계 작성 및 활용방안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방문인구 유입 및 매출액 특성분석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현안을 파악, 광역지자체별 분석을 통해 여러가지 타겟을 설정해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면 관계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 중앙정부와 민간 합동 정책적 활용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정책 및 목표를 설정하는 등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데이터 표준화·플랫폼 마련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민간협력 극대화도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차별화 민간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필요
지자체 수입 자율성·지출 책임성 강화도

지난 2월1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기부금의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모금방법 제한 완화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사적모임 등에서 고향사랑기부 권유가 허용됐으며, 지정기부 제도 실시로 인해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자 공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도 가능해졌다. 특히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공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데다 이를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지속적 기부를 독려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이 외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현행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서 답례품 제공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민간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기부금 접수 근거를 마련하지는 의견도 나왔다. 일본 지자체는 민간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고향납세의 번거로운 납부 절차를 생각한다.

민간 정보시스템은 일반 온라인 플랫폼처럼 지자체를 통해 답례품 조달자와 전국의 기부자를 직접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부자는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하거나 플랫폼 특성에 따라 포인트, 기프트권 환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지자체의 기부금 수입이 온라인플랫폼의 수입으로 유출,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격차를 해소한다는 고향납세 제도 취지가 퇴색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2023년 총무성 고시 제244호 고향납세 지정을 위한 재검토' 시정 조치를 통해 민간 정보시스템 중개수수료 등을 고향납세 경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고정비용 성격의 수수료 인자가 불가능함에 따라 50% 경비 총액 기준을 맞추기 위해 답례품 감량 또는 품질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국내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일본과 달리 소액 기부금과 소액 답례품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민간 정보시스템 도입에는 한계가 있다.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사실상 제대로 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액 세액공제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향사랑기부금 경비 총액도 현행 45%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들에게 단순한 답례품을 전달하는 사업이 아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을 기반으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진행하며 각 지자체의 수입 자율성과 지출 책임성을 강화해 중앙정부 중심의 형식적 차지에서 실질적 자치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드는 혁신적인 기부 방식이다.